

1부 개념과 담론

사 회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발 제

주제 1: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발제: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 2: 한국 민주화과정과 정치적-이념적 지형의 변화

- '보수 대 진보'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발제: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토 론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노희찬(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박형준(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여는 글

‘제1기 민주화’가 끝나고 제2기 민주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난 2002년 대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노 대통령의 승리는 제 1기 민주화, 특히 ‘민주화운동 출신 대통령’ 들인 양김의 10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이 이들 양김의 노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개혁적 자유주의’ 내지 ‘개혁적 보수’ 노선을 다시 한번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 그러나 동시에 노대통령의 승리는 양김으로 상징되는 한국적 자유주의 정치의 불구성, 즉 사당정치 등에 대한 비판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나아가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인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노무현정부 출범에 이르는 ‘제1기 민주화’ 15년을 이를 추동해 온 민주화운동과 그 성과로서의 한국 민주화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문제를 그 개념적 연관과 한국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1)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간의 관계를 일반이론 수준에서 추적한 뒤, 2)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확한 외연을 민주주의의 ‘과학적’²⁾ 개념화에 기초해 규명하고, 3)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특징과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즉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2002년 대선과 노무현정권의 의미”,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사, 2003 참조.

2) 푸코 등 탈근대론자들이 보여주었듯이 ‘과학’, ‘진리’라는 담론은 소위 ‘비진리’에 대한 억압성을 내장하고 있는 ‘반민주적 담론’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과학적’ 개념화라는 것이 형용모순일 수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상대주의로 빠질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호철, “사회과학: 과학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손호철, 『근대와 탈근대의 한국정치』, 문화과학사, 2002).

2.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먼저 우리는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논쟁적 주제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것은 민주주의란 어떠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민주화란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상태에서부터 또 다른 상태인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촉발시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을 인과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초래하고, 민주화라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들 간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또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변수들이 유일하게 민주화운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이 그 주관적 의도와 달리 민주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정반대로 당초 민주화운동이 아닌 행동들이 의도하지 않게도 민주화에 기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좌절시켜 한국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잔인한 학살을 통해 80년대의 치열한 민주화운동을 불러옴으로써 민주화에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 같이 소위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³⁾이다. 또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기타 다른 행동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만이 아니라 산업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다.⁴⁾ 즉 민주화 동학의 분석에 있어서도 소위 ‘구조 대(對) 행위’⁵⁾라는 문제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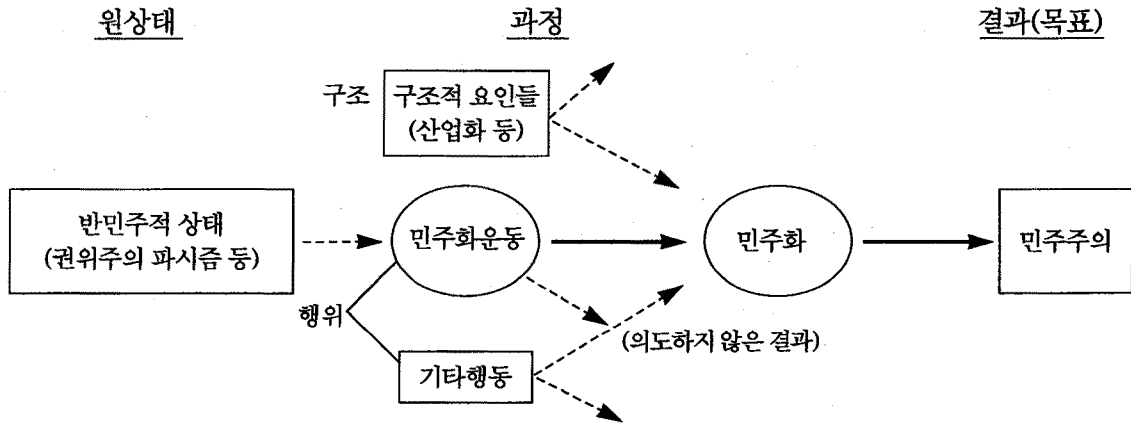
이 장에서 논의한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리하여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3) 현대 사회과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선구적 분석은 “Engels to Joseph Bloch, Sept. 21, 1890”, Marx-Engels, Selected Correspondence, Moscow: Progress Pub., 1975, p. 375.

4) 이 논쟁에 대해서는 손호철, “한국민주화: 이론적 쟁점”,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사, 2003.

5)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한국정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손호철, 위의 책, 26-28쪽.

그림 1.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의 관계



3.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 외연⁶⁾

위에서 우리는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 간의 형식적 관계만을 다루었을 뿐, 그 내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뤄 놓은 바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인 정의와 외연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와 외연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명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이하 민주화 보상법)이 통과된 이후 다양한 과거의 시국사범들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 인정과 보상신청을 해오면서 개별 사안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 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무엇이 한국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하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우선 한국 민주화운동은 좁은 의미의 운동 내지 일종의 고유명사로서의 한국민주화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이라고 불러 온 것으로서 군

6) 이 부분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손호철,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의 내포와 외연”, 『기억과 전망』, 창간호(2002년)를 발전시킨 것이다.

사독재에 대항해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벌여온 저항운동을 지칭한다(사실 70년대의 경우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도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발족하면서 '민주회복'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민주화 보상법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화 보상법 시행령은 민주화 보상법에 규정된 '항거'를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 하지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주화운동을 더 체계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상적 용법을 넘어서 한국 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와 외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한 운동은 모두 한국 민주화운동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를 다르게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이념들이 경쟁한 바 있다. 물론 소련, 동구권 몰락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 같은 다양한 이론 중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특권화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단순히 엘리트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이해하는 슐페터 류의 최소주의적인 정의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론적 정세이다(아래 참조). 그러나 긴말이 필요 없이, 민주주의가 단순한 엘리트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정치적 민주주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억압, 착취,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민주주의에는 크게 보아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이론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론이 주목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 정치적 민주주의로서 이는 특히 소련 동구권 몰락 이후 더욱 특권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특권화 이외에도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단순히 직선제와 같은 엘리트 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슈페터 류의 '최소주의적' 입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슈페터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인민' 이란 용어와 '지배' 라는 용어의 어떤 의미에서도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 다만 인민이 그들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따름"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결국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 결정권을 얻고자 하는 것을 그 협의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적 협정"이다.⁷⁾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경쟁에 의한 엘리트 지배에 불과하며 따라서 민주주의 여부는 엘리트 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느냐에 불과할 뿐 일반국민들의 자유권 보장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더라도 보통선거권만 보장되고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만 이루어지면 그 상태는 민주주의다. 이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잘못된 견해이다. 다시 말해, 직선제와 같은 엘리트 간의 공정한 선거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제약된다면 이 같은 정치체제를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신, 정치적 민주주의는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선호의 형성, 표현의 기회에서의 평등, 즉 사상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란 슈페터가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로버트 달의 다두정(polyarchy) 수준은 되어야 한다.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다두정은 1)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preferences)를 형성할 기회, 2)선호를 나타낼 기회, 3)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이 선호를 다른 선호들과 동등하게 취급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1)조직의 결성과 가입의 자유, (2)표현의 자유, (3)투표권, (4)피투표권, (5)대안적 정보의 접근권 등을 필요로 한다.⁸⁾

둘째는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관심을 갖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자유권에 대비되는 사회권의 문제로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의 문제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권력자원

7)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20장 3절, 22장 1절, 23장 1,2절

8) Robert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1-4.

(power resource)을 동원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⁹⁾ 그 권력자원 중 핵심자원의 하나인 부의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할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비민주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를 막는 방편, 내지 수단으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권리, 즉 사회권¹⁰⁾은 유엔의 인권헌장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구성부분이다.

셋째, 맑스주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radical) 좌파들이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로서 생산자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 생산자 민주주의인데, 모든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공장 문 앞에 오면 멈추게 되어 있고 공장 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방적인 지시, 복종과 지배, 종속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장전제정' 체제이다.¹¹⁾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자기실현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의 노동과정을 끝내고 작업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장 독재에 저항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한 결정을 하는 생산자 자주관리가 생산자 민주주의이며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아무리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인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생산자 자주관리처럼 생산자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부 진보적인 선진자본주의의 경우 주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형태의 산업민주주의¹²⁾를 실시해 온 바, 이는 생산자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다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데 이론적 초석을 제공한 달의 경우도 자기비판을 통해 보다 급진적 입장으로 변화해 가면서 "회사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들간에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¹³⁾

넷째, 포스트주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이다. 포스트주의가 잘 지적하고 있듯

9) Robert Dahl,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10) 이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는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Bryan Turner et al eds., *Citizenship(II): Critical Concepts*, London: Routledge, 1994, pp.5-44.

11) 맑스의 『자본』에서 공장법에 대한 분석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로 『감시와 처벌』에 나타난 푸코의 문제의식의 기초가 된바 있다.

12) Magaret Kiloh, "Industrial Democracy", in David Held et al. eds., *New Forms of Democrac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6, pp.14-50.

13) Robert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 115.

이,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나 자본과 같은 거대권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는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면 다양한 일상의 삶의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¹⁴⁾ 즉 남성중심주의적인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젠더 민주주의의 문제로부터 소수자운동으로서의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같은 차이(difference)의 민주주의, 대학의 주요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주장해온 학생운동이 함의하고 있는 대학의 민주주의 문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는 도처에 존재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해 볼 경우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민주화운동을 첫 번째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세 번째의 생산자 민주주의, 네 번째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노력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기본권을 위한 전태일의 분신, 작업장에서 군대식의 명령체계에 저항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 남성중심의 호주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유신 시절 장발 단속에 저항한 대학생들의 저항, 규격화된 교복제도에 저항한 고등학생들의 저항과 같은 '미시저항' 들도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위에서 인용한 민주화 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민주화운동에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이 법안이 국가의 보상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국가의 보상 책임이 있는,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한 경우로 국한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법적 제한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을 단순히 국가권력에 저항한 경우로 국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상의 민주화운동 정의는 해석상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것은 이 법이 정의한 민주화운동의 규정 가운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넓게는 국민의 권리가 무엇이나, 좁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무엇이나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

14) 이에 대해서는 Foucault의 저작들 참조. 또 Foucault의 권력론의 비판적 평가는 손호철, “푸코의 권력론 읽기”, 손호철, 『근대와 탈근대의 정치학』(위의 책).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리의 헌법, 즉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통념과 달리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의 헌법은 신체의 자유로부터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21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같은 소위 자유권만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노동 3권(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인간의 행복추구권(10조)과 같은 사회권, 그리고 환경권(35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군사독재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운동, 즉 위에서 지적한 첫 번째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운동만이 아니라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세 번째의 생산자 민주주의 운동 역시 민주화운동이다.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기본권들을 고려할 때 동성애자들의 인정 투쟁 등 네 번째의 일상의 민주주의의 운동, 나아가 제일 앞부분에 지적한 모든 억압, 착취, 배제, 차별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큰 원칙 하에서 몇 가지 더 짚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제3세계적 맥락과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 학생운동과 재야운동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온 반미자주화와 통일운동의 문제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 운동은 직접적으로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함한 현대사회의 문제가 일국적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일국적 수준의 문제, 국내의 문제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¹⁵⁾ 즉 외세의 문제, 분단과 통일의 문제도 그것이 우리사회의 억압, 착취, 배제,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민주주의나 기본권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 또한 민주화운동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 글에서는 ‘대외적 민주주의’ ‘대외적 민주화’ ‘대외적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음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합법성, 폭력성의 문제이다. 즉 민주화운동은 억압, 착취, 배제,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다양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추구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 운동에 국한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방법과는 무관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보상법 자체도 합법성, 폭력성 여부를 민주화운동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사실 민주화운동을 평화적 방법으로 국한할 경우,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80년 5.18민중항쟁도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 따라서는

15) 이에 대해서는 John Burnheim, "Democracy, Nation States, and the World System", in Held et al., 위의 책.

민주주의와 폭력성이 근본적으로 모순 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폭력적 방식에 의한 저항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논쟁이 필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폭력/평화학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요한 갈통이 잘 지적했듯이 폭력이란 단순한 직접적 폭력만이 아니라 반민주적 질서와 같은 구조적 폭력을 포함하며¹⁶⁾ 민주화운동 등 많은 저항운동이 5.18항쟁처럼 구조적 폭력, 나아가 군부의 강력한 직접적 폭력에 저항해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직접적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폭력성 여부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폭력 여부를 민주화운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반민주적 체제의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에 저항해 민주운동의 대항폭력이 개입된 5.18이나 프랑스대혁명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앞에서 지적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의도’와 ‘결과’의 문제이다. 즉,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운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운동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1) 의도도 있고 결과적으로도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으로 국한하는 가장 엄격한 입장과, 2) 의도로 규정하는 입장, 3) 결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는 행동의 현실적 효과로서의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경우, 특정 운동이 민주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현실적 기여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기술적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전혀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 아닌데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민주화운동이 되고 마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박정희의 유신선포와 민주헌정 탄압은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민주화운동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유신선포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엉뚱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목적의식적인 운동이 아니라 막걸리 보안법 피해자와 같이 특별한 목적의식적 행동을 하지 않은, 단순한 군사독재의 피해자들도 민주화운동인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정반대로 단순히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최근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극우냉전세력의 정치화이다. 즉 자유시민연대 등 극우냉전세력의 정치화와 관련해, 반북반핵집회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

16) Johan Galtung, *Peace and Social Structure*, Prometheus Books, 1978.

은 집단적 움직임을 진정한 '민주화운동' 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외연에 대한 골치 아픈 문제를 또 하나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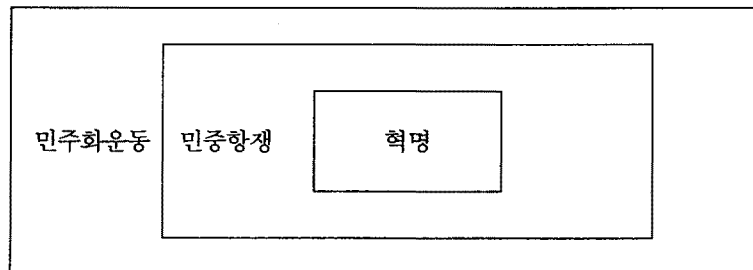
복잡한 문제를 접어두고 다소 쉬운 문제, 그러나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다. 즉 한심스럽게도 민주화보상법이 김종필 자민련 총재라는 현실정치세력의 존재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1969년 이후, 즉 박정희의 삼선 개헌 이후의 운동으로 국한한 것이다. 이는 삼선개헌 이전에는 한국이 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이야기, 따라서 예를 들어 6. 3사태와 같이 이에 저항한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또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4.19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을 1969년 이후로 국한시킨 민주화보상법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과 관련된 민주화보상법을 넘어서 이론적 측면에서 그 시기적 하한선을 언제까지로 거슬러 내려 갈 것이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민주화운동은 그것이 반드시 근대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시기를 근대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즉 만적의 난, 동학과 같은 전근대시대의 다양한 저항, 민란들도 사실은 민주화운동이다. 이 같은 근본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논의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 진행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을 69년 삼선개헌이나 61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출범이후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48년 국가설립 이후부터 민주화운동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시기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시기적 하한의 정반대의 문제, 즉 시기적 상한의 문제이다. 민주화와 민주주의란 지속적인 과정이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시기적 상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소위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부로 생각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일어난 다양한 저항 운동들도 민주화운동이다. 즉 민주화운동이 박정희, 전두환정권과 같은 공공연한 독재체제에 저항한 운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주화보상법이 시기적 상한을 정해놓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김대중, 노무현정권 등에 저항해 민주화운동 인정과 보상요구를 계속 불러올 수 있다는 행정기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정신면에서는 맞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집고 넘어갈 것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 나아가 혁명과 같은 다른 집단행동과의 관계이다. 특히 이를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은 90년대 소련 동구권 몰락 후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광주 지역의 '급진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광주지역의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¹⁷⁾ 5.18이 '민중항쟁'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와 달리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

17) 이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도 포함된다.

답스러운 것으로 느끼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므로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명칭 대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또 보수적인 주류정치학에서 민주화와 민중혁명을 대비시키며 '급진반대세력' 주도의 민중혁명과 달리 민주화는 군부와 민주화운동진영의 온건파들이 타협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타협에 의한 민주화를 특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87년 6월 항쟁,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79년 10월의 부마항쟁과 같은 민중항쟁, 그리고 4.19혁명, 나아가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들이 민주화운동과 대립되는 배타적인 것들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간의 관계는 일종의 '포함관계'로서, 민주화운동의 외연이 가장 넓고 민중항쟁이 이중 일부의 특수한 민주화운동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외연이 좁고, 혁명은 그 중에서도 특수한 극소수의 민주화운동, 특수한 민중항쟁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80년 5월의 광주와 79년 10월의 부마항쟁은 모두 민중항쟁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민중항쟁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그림 2.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혁명 간의 관계



4.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위에서 우리는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뒤 민주주의의 체계적 이론화에 기초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외연을 분석해 보았다. 이 같은 작업에 기초해 이 장에서는 한국 민주화운동,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논의를 1953년 이후로 국한하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

18)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1(1990) 등 참조.

했듯이 민주화운동이 근대시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근대로 국한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성립된 1948년 이후부터 민주화운동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전근대시기나 해방정국을 포함해 민주화운동을 논의할 경우 그 논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해방정국이 끝나고 분단체제가 자리 잡은 1953년 이후로 그 논의를 국한한 것이다.

가. 한국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위에서 지적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해 한국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관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1기는 80년 광주 학살까지의 기간으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하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적인 투쟁의 목표로 했던 시기이다. 물론 60년 4.19혁명 이후 다양한 진보적 운동이 복원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70년대 초에는 전태일의 분신, 칠거민들의 광주민란 이후 국민대중의 생활 등 사회권에 대한 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군사독재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자유주의적 운동이었다. 이는 이 시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주체들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재야, 학생 등 주로 비판적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2기는 80년 광주학살로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제1기와 마찬가지로 군사독재에 저항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광주학살에 의한 우리사회의 급진화의 결과로 자유주의적 틀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려는 급진적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화운동, 좌파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고 동시에 소위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민족해방(NL)' 파를 중심으로 한 자주화 등 '대외적 민주화' 운동도 활성화됐다.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그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재야였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을 구성한 것은 과거의 자유주의적 세력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반독재투쟁을 주도한 급진적 민주화운동세력이었다.

제3기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이다.¹⁹⁾ 이 시기는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계속 되지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합법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다양한 운동들이 분출

19) 제3기와 제4기의 분기점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 이는 급진운동의 패배가 확실해지는 91년 5월 분신정국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는 1993년 초로 볼 수도 있고, 더 나가면 90년대 중반으로 볼 수도 있다.

되면서 노동자, 농민들로부터 학생과 급진적 지식인들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들의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생산자 민주화운동, 대외적 민주화운동 등 급진적 민주화운동이 정점을 이루던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 제2기와 비슷한 이 시기를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제2기에 시작된 다양한 급진적 민주화운동이 피크를 이루었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주체의 변화이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동안 반독재투쟁을 위해 연대해 왔던 자유주의적 세력(정치적 민주화에 주된 관심이 있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세력)과 급진적 민중세력(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생산자 민주화운동, 대외적 민주화운동 세력)간의 분화와 대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진적 운동과 관련해 기존의 학생과 지식인 이외에도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계급이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또 시민운동이 생겨났지만 아직은 핵심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시기이다.

제4기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²⁰⁾ 우선 이 시기는 그간의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로 정치적 민주화운동이 점차 약화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 생산자 민주화운동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소련동구의 몰락 등으로 한국사회가 빠르게 보수화되면서 급진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이들 급진적 민주화운동은 위기에 처하고 급속히 해체되게 되지만 대중운동, 즉 지주적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등은 민주노총의 출범과 성장이 보여주듯이 서서히 성장해 오고 있다.²¹⁾ 그러나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포스트민주주의적 의제들이 전면화 되면서 포스트민주화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즉 거대권력인 국가권력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소련,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사회변혁을 둘러싼 거대담론들이 무너지면서 환경문제, 젠더민주주의 문제, 이주노동자나 동성애 등 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포스트민주주의적 문제들이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운동 주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3년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온 학생운동의 퇴조이다. 즉 학생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선도세력, 중심세력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이를 대치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과 기층계급운동이다. 특히 시민운동이 정치적 민주화와 포스트민주주의적 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면 노동자, 농민을 중심

20) 사실 운동사적으로 볼 때 2000년 6월을 기점으로 또 하나의 시기구분을 할 필요를 느끼기는 한다. 즉 연이은 반핵반김 집회가 보여주듯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수구냉전세력의 정치화, 운동세력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를 민주화운동 속에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를 일단 논외로 했다.

21)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 일부 외부관찰자들의 경우 90년대 중반 전자만을 주목하여 '노동운동의 위기' 등을 논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영일, "한국의 노사관계와 계급정치", 임현진 외,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으로 한 기층계급운동, 민중운동은 사회경제적 민주화, 생산자 민주화, 대외적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기별 특징

※선의 굵기는 운동의 강도를 표시한 것임

	1기 (1953~1980)	2기 (80~87)	3기 (87~90년대초)	4기 (90년대초~현재)
정치적 민주화 운동	————→	————→	————→	————→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	————→	————→
생산자 민주화운동		————→	————→	————→
대외적 민주화운동		————→	————→	————→
일상성 민주화운동			————→	————→
주체	학생, 지식인 (자유주의적)	학생, 지식인 (급진주의적, 자유주의적)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시민운동) (급진주의, 자유주의 분화)	시민운동 노동자, 농민 민중운동

그러면 이처럼 시기적으로 발전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그 강도와 지속성이 아닌가 싶다. 물론 민주화운동의 강도와 지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한 연구는 없는 것 같고 나 역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한 연구자는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에 대해 ‘운동사회(movement society)’ 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는데²²⁾ 이 같은 개념에 가까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닌가 싶다.

최소한 1953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한,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방법 내지 수단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인 비폭력성이다. 물론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러 시위현장에서

22)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ch. 11, "Movement Society?"

화염병과 파이프 등이 동원되어 공권력에 대항하는 '대항폭력'이 행사된 바 있고 최근 쟁점이 된 바 있듯이 동의대 사건 등과 관련해 인명의 살상까지 생겨난 바 있다.²³⁾ 뿐만 아니라 80년 봄의 경우 광주민중항쟁과정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무장항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상황이고 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독재정권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어적인 대항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나 게릴라전과 같은 무장투쟁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주목할 것은 대신 한국 민주화운동이 극단적인 경우 택한 것은 테러나 무장투쟁과 같은 폭력적 투쟁이 아니라 분신, 투신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폭력이었다는 사실이다. 91년 분신정국으로 상징되는 이 같은 자기희생적 '분신의 정치'는²⁴⁾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통일 이전의 베트남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지만 한국처럼 테러활동이 부재하고 대신 분신의 정치가 활성화됐던 나라는 없었다. 이는 분단과 반공주의가 한국 민주화운동에 가한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분단의 조건 하에서 민주화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취했던 전술적 선택이었다.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물론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시기별로, 그리고 민주주의 종류(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등)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여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주도성이다. 물론 학생운동의 주도성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 약화되어 이제 더 이상 학생운동이 결코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흔히 하듯이, 이를 일제 하의 '광주학생운동' 등 '학생운동의 유구한 전통'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목할 것은 학생운동이 해방공간인 1945~53년에 결코 중심적인 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 87년 민주화 이후 그 주도성을 잃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동운동 등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자면 1953년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해방정국을 거치고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이 사라져 버린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1987년 민주화가 되고 노동운동, (뿌리부르주아적 계급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운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의

23) 문부식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동의대사태만 해도 '우발적 사고'에 의해 인명피해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가장 폭력적인 사례는 오히려 한총련이 프락치 용의자를 잡아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해 살해한 사건이다.

24) 이에 대해서는 김정환, 『대중과 폭력』, 이후, 1994;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편,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2002.

주도성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주체라는 면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부르주아 계급의 불참여와 자유주의 세력의 취약성이다. 물론 부르주아계급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생산자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투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민혁명에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제3세계의 경우 이 같은 일반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들의 대차대조표는 훨씬 복잡해진다.²⁵⁾ 그러나 제3세계의 경우도 소위 민주화의 ‘제 3의 물결’ 이라고 부르는 최근의 민주화에 있어서 군부에 대해서 자본가계급이 “사실상의 반정부세력으로 활동”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권력자원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²⁶⁾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르주아계급은 이 같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항상 군부독재 등과 연대해 반민주세력의 중심에 자리 잡아 왔다.²⁷⁾ 예를 들어 87년 6월 항쟁에서도 이들은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저항해 전두환의 호헌선언에 지지성명을 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지향이 도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강력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부르주아계급이 사회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아직 갖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²⁸⁾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주의세력의 취약성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자유주의세력은 ‘정치사회’의 보수야당이었던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자유주의세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민주화 주도세력이 진보적인 민중세력이었지 자유주의 세력은 아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시민운동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시간’ 과의 ‘엇박자’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적합한 분석단위는 일국적 국민국가들이 아니라 세계체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세계체제’의 역사적 흐름을 시간이란 개념으로 표현해주는 ‘세계시간’

25) 이에 대해서는 D. Rueschemeyer et al.,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92.

26) G. O' Donnell & P.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6, p. 50.

27)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46-50& 56-58쪽.

28) Carter Eckert,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for Hegemony”,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이다. 물론 87년 6월 항쟁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하고 여러 면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시간과 단절되어 엇박자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제3세계에서 여러 급진적인 민주화운동·사회운동이 발전했던 50-60년대, 서구에서 급진적 민주화운동이 발전했던 60년~7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분단의 질곡에 갇힌 채 기본적으로 협애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주의적 민주화운동'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처의 신보수주의혁명 그리고 소련 동구권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세계시간의 보수화' 국면(즉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학살의 덕으로 세계시간과는 정반대로 때늦은 급진화를 경험했다.²⁹⁾ 그 결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민주주의, 자주화 등 '대외적 민주주의'를 위한 급진적·진보적 민주주의 운동은 그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막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시간과의 엇박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수는 세계시간으로서의 '지구화',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집권한 본격적인 자유주의 정권들, 즉 김영삼정권과 김대중정권의 집권기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세계시간대와 일치하면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시장자유주의로 형해화 되었다.³⁰⁾ 그 결과,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치인이지만 70년대 이후 대통령 자리를 노렸던 제도권 정치인 중 가장 진보적이었고 집권 후에도 서민의 정부를 자칭했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빈부격차가 이를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박정희정권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주의와 관련된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문제이다. 세계사적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68혁명의 결과로 가시화되어 이후 꾸준히 발달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군사독재에 대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압도적 과제로 자리잡아온 현실에 의해 전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87년 민주화 이후, 그리고 소련 동구권의 몰락 이후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압축폭발'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위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29) 나는 이 같은 현상을 노동운동과 관련해 '초기의 부진과 때늦은 개화'라는 '이중적 예외' (세계적 흐름에 대한)라고 표현한 바 있다(Hochul Sonn, "The Late Blooming of South Korean Labor Movement", Monthly Review, June-Sept., 1988).

30) 이에 대해서는 조현연, "자유민주주의" 지배담론의 역사적 궤적과 지배효과",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한국 민주화는 크게 보아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4.19와 같은 단절적 계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민주화의 유형적 측면에서 볼 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군사독재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간의 '타협에 의한 민주화', '거래(transaction)에 의한 민주화'³¹⁾의 형태를 띠었다. 물론 87년 6월 항쟁 당시 6.29선언은 양 진영간의 타협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에 의해 강제된 군부의 항복 선언에 가깝고, 따라서 한국 민주화가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에 가까운 것은 사실³²⁾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력은 4.19때와 같이 군사독재세력을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군부와의 타협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는 이후 한국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귀결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위에서 지적한 '타협에 의한 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운동사회'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역동성을 가지고 지배세력에 민주화를 강제하고 활기차게 움직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데 실패해 왔다. 오히려 운동의 결과는 국민적 저항과 요구가 지배세력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지배세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동혁명'으로 귀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³³⁾ 87년 6월 항쟁이 6.29선언, 나아가 양김의 분열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수명 연장으로 끝나야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었던 김영삼의 3당통합을 통한 집권, 김대중의 디제이피연합을 통한 집권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다.

'민주화운동의 수동혁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³⁴⁾로 나타나 왔다. 즉 시민사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압박을 가해 오고 있지만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수용하고 못하고 있는 낙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특히 주목할 것은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민중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해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로부터 생산자 민주화 등 다양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사회의 경우 보수일변도로 편성된 지난 50년간의 기형성에 전혀 변화가 생겨나지 않고 있다. 즉 진보세력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다양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아직도 정치사회에서 제대로 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31) 이 같은 유형학에 대해서는 Scott Mainwaring, "Transition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 Mainwaring et al.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32) 이에 대해서는 성경룡, "한국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적 접근", 임현진 외 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나남, 1995.

33) 수동혁명에 대해서는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한국정치에 대한 수동혁명적 성격에 대해서는 최장집의 저술을 참조할 것.

34) 이에 대해서는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과 임영일, 위의 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같은 민주화를 통해 획득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선,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 나아가 노무현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보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도 한국은 아직 정치적 민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도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이다. 얼마 전 몇 명의 대학생들이 단순히 (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농활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근의 최소주의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의 대표적인 연구조차도 “특정한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적 흐름을 금지” 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기껏해야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⁵⁾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방문 중 이야기했듯이 한국도 일본처럼 공산당이 허용될 때 완전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관련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2기 민주화에 의해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들이었던 사당정치와 ‘위임 민주주의(delegateive democracy)’³⁶⁾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이며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복지를 늘려가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5.9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⁷⁾ 뿐만 아니라 1997년 경제위기와 함께 김대중 정부가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한 뒤 빈부격차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7년 2.18에서 98년 2.80, 99년 2.88, 2000년 0.301, 2001년 0.303, 2002년 0.305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생산자민주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생산자 민주주의는 한국의 다양한 민주주의 중 가장 낙후한 분야이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자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그동안 군의 위계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병영적 노사관계에 기초해 생산자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이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약속해온 김대중정부와 참여 정부를 내세운 노무현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 정부들도 경영의 문제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장의 해외이전 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초보적인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에 합의하자 언론과 재계가 하나가 되어 이를 맹공격한 바

35) O' Donnell & Schmitter, 위의 책, p.9.

36) 선거는 민주적으로 치루어지되, 이후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위임되는 문제점을 지칭한다.

37) 『한겨레신문』, 2002년 9월9일자.

있다.

대외적 민주주의도 아직 매우 부족한 분야이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일부의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과장된 것이지만 주한미군의 주둔과 국군통수권문제, 불평등한 SOFA협정 등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대외적 민주주의는 '비교 제3세계' 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³⁸⁾ 결국 이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을 계기로 촛불시위라는 대중적 저항을 촉발시켰고 촛불시위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미국발언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대외민주주의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사실상 집권과 함께 중발되어 버리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반독재민주화와 변혁이라는 거대담론에 밀려 무시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분야별로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젠더 문제의 경우, 오랜 가부장적 질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고 이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호주제문제에서 잘 볼 수 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역시 아직도 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생산자 민주주의나 대외적 민주주의와 같은 '거대민주주의'의 쟁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해 나갈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맺는 글

이 글은 제2기 민주화의 시작을 맞아 그간의 민주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제2기 민주화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 간의 개념적 관계를 살펴본 뒤 최근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 논쟁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외연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같은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한국 민주화의 특징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 수준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이 그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어 왔고 이에 따라 획득된 민주주의의 수준도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문제로서 한국 민주화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외연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보다 본격적

38) 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한국국가성격 논쟁",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참조.

인 논쟁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인 개념화를 도출하는 한편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사적, 민주주의 유형별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특히 그간의 정치적 민주화운동 중심의 민주화운동연구를 벗어나 다양한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개별 민주화운동사(예, 동성애 민주화운동사)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또 이에 기초해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이들 특성간의 인과적 연계를 밝히려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문제로서, 왜 한국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의 치열성에도 불구하고 수동혁명과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어 왔는가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 제2기 민주화운동과 2기 민주화의 지침으로 삼아나가야 한다. 특히 그간의 민주적 성과까지도 빼앗아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